

성명 아베정권은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규제를 철회하고

진지한 과거청산에 나서라 !

- 이제 일한민중은 `NO 아베 !`로 연대를 강화하자 -

2019년 8월 6일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

070-6997-2546 <http://nikkan-net.cocolog-nifty.com/>

아베정권은 7월 4일 반도체 3부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`화이트리스트`에서 제외하는 각의결정을 진행했다.

우리들은 이러한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시 철회를 요구한다.

일련의 조치들이, 작년 10월말 이후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부정하고, 박근혜정권 시기의 `일한합의`로 만들어진 `위안부`재단의 해산조치를 진행한 한국의 문재인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임은 명백하다. 애초에 징용공 문제도 `위안부`문제도 일본정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의 진지한 반성 하에 피해자도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해결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이 근본원인이다.

지독하게는 고노외상이 주일한국대사를 불러놓고 언론 앞에서 대사의 설명을 가로막아 “무례하다”고 한국 사람들의 감정을 오히려 자극하는 언사를 내뱉었다. 고노야말로 예절도 모르는 `무례한 자`가 아닌가.

이에 문재인정권이 굴하지 않고 정치적, 경제보복의 금지를 내건 WTO 제소가 초첨화되자 이번에는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 않고 살금살금 조선(북한)에 대한 유출의혹까지 제기하여 `안보상 조치`니 `국내절차 문제`니 하면서 발뺌 하려고 하고 있다.

이번 조치는 스스로가 `모기장 밖`에 내몰린 꼴이 된 남북정상합의나 북미정상 회담을 추진하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방해와 보복의 의도도 담겨져 있다.

이로 인해 일한관계는 `과거 최악`이란 사태에 이르렀다. 그 이유는 아베정권이 박근혜 잔당세력이나 보수언론과 기맥을 상통하고, 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과거청산과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`문재인정권을 부스려는데 조준`을 맞췄기 때문이다.

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아베정권의 의도를 간파하고 `역사왜곡·경제보복·평화위협`으로 이에 반대하여 일어서기 시작했다.

일본 언론에서는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움직임을 `반일행동`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`반일`이 아니라 `NO! 아베`행동이다. 한국사람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여행 취소 등, 아베정권이 빼낸 칼날이 일본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.

지금, 중요한 것은 일본민중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일한민중교류 확대와 `NO! 아베`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.

아베정권은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규제를 철회하라 ! 진지한 과거청산에 나서라 !